



건강보험 상담원 파업하다 외주화와 차별이 불공정이다 직접고용 하라

관련 기사 12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3면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4면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5면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공정을
보장하는가?

6~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을 수령에
빠뜨린 전쟁광
럼프펠드 사망

9면

아프가니스탄 철군
- 미국의 참패

10면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몰락

11면

울산 로젠택배 노동자들

“사기가 좋은 이때 투쟁해 더 개선하자”

김지태

울산지역 로젠택배 노동자들(택배노조)이 최근 택배노조의 택배기사과로사 방지 합의 성과를 발판 삼아,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투쟁을 준비 중이다.

로젠택배는 6월 택배 파업의 성과로 9월에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 1000명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분류 작업을 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류 작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로젠택배에는 분류 인력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나와 일했다. 심지어 새벽에 배송이 끝난 날은 터미널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일하기도 했다. 결국, 올해에만 노동자 2명이 쓰러졌고 안타깝게도 1명은 생을 마감했다.

로젠택배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의 약 30퍼센트는 대리점과 계약한 팀

장이 고용을 하는 다단계 구조다. 배수홍 전국택배노조 로젠동물산지회장은 팀장의 횡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팀장들이 수수료(임금)를 중간에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깎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 인원으로 잡히지 않는 유령이나 다름 없어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팀장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7월 27일부터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사나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이번 합의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체결·갱신해야 한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고용을 최소 6년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로젠동물산지회 노동자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투쟁의 성과 중 하나가 회사가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책임지기로 한 것인데, 로젠택배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노동자들더



산적인 문제들 개선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레일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러 절반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팀장에게 계약서도 없이 고용된 노동자들은 고용 인원으로 잡히지 않아 보험료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안해 한다.

노동자들은 조만간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 군산에서 조합원 1명이 해고됐는데, 정황상 대리점이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조합

원들의 사기가 많이 오른 이때 투쟁해서 저들에게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수홍 로젠동물산지회장)

자신감

이외에도 로젠동물산지회 노동자들은 개선해야 할 작업장 환경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분류 작업을 전담할 인력이 1000명으론 부족하다고도 말한다. 또 택배기사 분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

율을 개당 수수료가 아니라 시급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물건을 나르는 레일에 바짝 붙어 본인이 배송할 택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다 레일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말한다.

화장실 세면대 마련, 냉난방 기기 확충, 우천 대비 시설 마련, 암을 유발하는 터미널 바닥 물질 제거 등 노동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임준형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항 항공편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다량의 증거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연히 난민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6월 23일 ‘기후·노동·인권약당 막아내는 청년학생 공동행동’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난민 수용에 매우 인색하다. 문재인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19~2020년 연속 0.4퍼센트에 불과해, 2004년 이래 최저였다.

정부는 출신국 정부가 자신을 폭집어 탄압한다는 강력한 물증을 제시

해야만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예멘 난민 500여 명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 허가’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이 전혀 아니다. 고작 1년간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체류를 연장하려면 1년마다 심사를 받아 갱신해야 한다. 체류 기한이 짧고 불안정한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인도적 특별 체류로는 불충분

지난 3월 정부는 출국 기한이 넘어도 귀국을 원치 않는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장한 관련 비자(G-1)는 강제 추방만 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지원이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이미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강제 추방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단속되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다.

미얀마 항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미얀마인

이 더 생길 수 있다. 7월 1일 유엔 난민기구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2월 이후 살던 곳을 떠난 미얀마인이 약 21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1만 5000명은 인도로 탈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한 미얀마인들도 이런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는 한국에 계속 머물기 어려울 수 있다.

올해 4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기존의 빈곤에 코로나19와 현재의 정치적 위기까지 더해져 미얀마인 340만여 명이 향후 6개월 안에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얀마 전체 인구(5480만 명)의 6퍼센트에 해당한다. 또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는 쿠데타 이후 20만 명이 넘는 의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가난과 곤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상당수를 ‘경제적 목적의 가짜 난민’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0퍼센트 순수한 ‘경제 난민’도 순수한 ‘정치 난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인들이 원한다면 모두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임준형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보면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을 선택한 마당에, 지난해 배제했던 이주민들에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해 정부의 차별을 정당화해 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을 때 개선을 권고한 것과 모순된 결정이었다. 물론 이 권고에서도 미등록 이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민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인종차별

이주민들도 직·간접세를 내고 노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때문에 이주민은 대부분 내국인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019년 5월보다 1.7퍼센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2.1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고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이 0.5퍼센트 증가한 것에 견줘 변화 폭이 더 크다. 취업시간이 주 50시간 미만이거나 일시 휴직한 비율도 증가했다. 또,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가 12.4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지표들은 이후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한 안전망은 취약하다. 예컨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54.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김지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존칭 생략)가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년 전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와는 정치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여론 내 독보적 1위로 우파 야권의 대표 주자 윤석열과 양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근인 민주당 국회의원 정성호가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캠프 규모도 크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이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4년여 만에 국민의힘에 따라잡혔으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정권 유지 쪽보다 더 크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인기가 유지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이재명은 민주당 내 비주류로, 주류인 친문 세력과는 거리를 뒀 왔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문 실세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그때 전해철 측이 가족 관련 개인사 문제로 이재명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재명은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고초를 치렀다. 당시 일부 친문 인사들은 차라리 우파 야당(자유한국당) 남경필이 되는 게 낫다고까지 했다.

또, 이재명은 노동자·서민에 친화적이며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개혁가로 보이려고 애써 왔다. 문재인이 개혁 약속을 배신하고 대중의 염원을 저버린 것과 달리,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작은 개혁이라도 약속한 것을 실행해 왔다고 강조한다.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하려고 이번 대선 출마 선언에서 “약속 준수”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공정 경쟁”, “역강부약”과 함께).

이런 요인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 크게 환멸을 느낀 사람들 사이에서 ‘이재명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

행적과 기반

이재명은 출마 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강부약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런 강조는 이재명의 입지전적 인생 스토리와 만나 서민층에 호감을 주는 요인이다. 그는 경북 산촌의 빈농 가정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기도 성남시로 올라와 공장 노동자가 됐다. 그때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는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이재명이 공식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개혁파로 정치적 입지를 넓혀 왔다

남시의료원(공공병원) 설립 운동이었다. 그러나 2004년 성남시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가뻔히 폐기했다. 이 운동이 패배한 후 이재명은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해야’ 하고 ‘성남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이때 인권변호사·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하며 노동운동·엔지오 활동가들과 맺었던 관계는 이재명이 공식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된 듯하다. 성남시장 시절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늘린 것이나, 나중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것은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정계 진출 이후 이재명은 주류와 기득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하며 서민층의 호감을 샀다. 성남시장이 되어서 2013년에는 성남의료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었다. 청년 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도 액수나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시장주의 정책들과 대비됐다. 이재명은 박근혜의 노동개악도 비판했는데, 이런 요인들은 조직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줬다.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이재명은 한층 도약했다. 그는 박근혜 퇴진 촛불 첫 집회에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참가해 선명하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에 서울이나 경기 같은 광역단체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성 정치인이었으므로 아주 파격적인 행보였다. 촛불 운동의 성장과

함께 일약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박근혜 퇴진 요구 등에 굶뒀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기를 순식간에 추월해 버렸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문재인인의 온건함을 비판하면서 급진적 면모를 부각시키려 했다. 스스로 “성공한 샌더스”가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탄핵안 통과라는 의회 절차로 옮겨가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됐고, 민주당 주류 문재인이 당선하게 된다.

그러나 이재명 바람으로 표현됐던 노동자·서민층의 진보적 개혁 염원의 일부가 대선 본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로 일부 표현됐다. 1년 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은 대선 때 문재인이 경기도에서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득표했다. 노동자·서민층에서 이재명은 정의당과도 득표 기반이 일부 겹치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선 캠프에는 그의 기본소득론을 뒷받침해 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강남훈 교수가 포함돼 있다. 정책 참모격 인사 중에는 한총련 의장 출신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도 있다.

노동계 기반도 있다. 지난 6월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그간 사회적 대화 등을 강조해 온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국민파) 100여 명이 ‘국민과 함께하는 백만노동 추진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재명의 노동계 대선 지지 조직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이 단체 결성식에 축사를 보냈다. ‘국민파’가 아닌 다른 계열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을 결성했다고 알려졌다.

“약속 준수”

지난해 3월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경총 등 사용자들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자 이재명은 이를 비판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위기 재악화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때,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9월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때 이재명은 경기도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선별지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서 복지와 개혁을 여전히 강조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자신이 주장하거나 추진해 온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 격인 ‘성장과 공정 포럼’의 공동대표 김병욱은 “보편적 복지 실현”이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능력주의가 곧 공정’이라는 이준석 등 보수주의자들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최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자신의 제1공약은 (경제)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출마선언문에서도 ‘성장’을 11번이나 언급했다. 2017년에는 4번 언급했는데 말이다. 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장시간 노동 금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삼성을 포함한 재벌과 사드 배치 등을 비판하는 데 강조점을 뒀던 4년 전 출마 선언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다.

이는 그가 경기도지사직을 거치면서, 그리고 차기 대통령직에 가까워지면서 지배계급 내 평판과 기반도 신경써야 하는 처지가 됐음을 보여 준다. (급진 개혁으로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럴 것임을 설득해야 하는 압력 말이다. 사회 상층부와 타협도 필요해진 것이다.

최근 이재명은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부쩍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 성장하게 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소득 개념이 반영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문재인이 포기한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경기도에선 해내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경기도 풀센터 문제 등에서는 실망을 줬다. 이주민 다수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문제다.

지난 4년 동안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쏠타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왔다. 친서민적 개혁 정책을 주장하며 중앙 정부와 날을 세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 주류에 타협하거나 언행 수위를 낮추는 식으로 말이다.

조국 전 장관 부패 의혹에 침묵한 일도 그가 내건 “공정”, “역강부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재명도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보 포퓰리즘(민주주의)

종합하면, 이재명은 지배계급 정당인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친자본주의적 기반도 반영하지만, 개혁주의적 지식인들과 엔지오와 노동조합 지도부층도 상당히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대표하려 한다.

다계급 결속 전략의 전망 속에서 진보 개혁과 지배계급의 필요를 조화시키려는 진보적 포퓰리즘 정치인인 것이다. 이는 그의 대선 도전에서 강점일 수 있지만, 그의 개혁이 모순에 부딪힐 것임도 보여 준다.

최근에도 이재명은 친노동 개혁을 말하면서도 한국 자본주의를 관리할 안정적 리더로서의 면모를 입증하는데 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층에서 이재명에게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개혁 염원의 반영이다. 이는 거꾸로 이재명이 진보 염원층을 문재인 정부 시즌2에 대한 기대로 붙잡아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 대중과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염원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염원이 객관적 조건들이 부과하는 제약에 부딪힐 것이므로 대중 스스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생각과 힘을 전쟁 준비에 두라.” 유사시 대만 상륙 작전에 해병대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 발언도 대만을 향한 위협이었다.

시진핑의 이런 발언들은 지금 양안 관계가 심각해졌음을 반영한다.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친 이래,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 이른바 “양안 관계”는 양쪽 모두에서 첨예한 문제였다. 양측은 국지전과 전쟁 위기를 여러 차례 일으켰고,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은 대만 국민당 정권을 군사적·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풀리자, 양안 관계의 긴장도 누그러지며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크게 발전해 이제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이 악화하면서, 양측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등 대만해협에 긴장이 쌓이고 있다. 즉,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 때문에 대만해협은 1996년 미사일 위기 이래 긴장이 가장 높아져 있고, 자칫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이 됐다.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공공연히 지목하면서, 그들의 대만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양국 고위 관료의 상호 방문을 법제화했고, 2019년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중국을 자극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도 급증했다.

바이든 정부도 대만을 중시하기는 마찬가지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주미 대만 대표 샤오메이친이 미국 의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주미 대만 대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이래 처음이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파트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기업들에 중국 기업 화웨이 등과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해 왔다.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도 5년 만에 재개했다.

대만 내 정치·사회적 변화도 양안 관계에 영향을 줬다. 대만의 공식 정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분열돼 있는데,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 ‘대만 독립’ 노선을 주장해 왔다. 총통 차이잉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9년 시진핑 정부가 홍콩 항쟁을 강압적으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존 매케인함이 2021년 2월4일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대만/인도-태평양 전략

로 진압하자, 대만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차이잉원은 이 정서를 이용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결코 답답지 않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배 관료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 후퇴가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과 위신

용어설명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모두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기조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중국의 꿈(“중국몽”)을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애국주의를 부추겨 왔다. 미·중 갈등,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국내 불안정에 대응해 애국주의로 국민적 단결을 유지하고 통치 정당성을 강화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 차이잉원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통치력은 훼손될 것이다.

1994년 당시 대만 총통 리덩후이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대만이 독립을 선포한다면 티베트나 신장 역시 독립을 위한 행동에 나설지 모르므로 베이징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소련 해체 후, 중국 지배 관료들은 중국이 옛 소련처럼 여러 민족 공화국으로 분열·해체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대만 독립 선언’이 중국 내 다른 소수 민족·인종을 자극할까 염려한다.

오늘날 대만은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유용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 대만 주변의 바다는 미국은 물론 일본, 한국 등에도 중요한 바닷길에 해당하고 남중국해와도 이어진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내에서는 ‘대만 방어’가 곧 일본 방어도’하는 말이 나온다.

반면 대만을 잃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패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미국 정치권이 군사 지원 강화로 대만을 “요

새화”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까닭이다.

대만해협에 중요한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중국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 만약 대만까지 장악할 수 있다면, 중국은 자국 안보를 강화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대만해협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훈련, 상륙 훈련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특히 전투기와 폭격기가 대만 인근에 접근하는 무력시위를 매우 빈번하게 한다. 대만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대만에서 중국과 충돌할 것에 대비해 워 게임(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벌여 왔다.

두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해야

대만해협의 불안정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제국주의적 국가들 중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패권 유지 전략의 일부로서 이 지역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사시 주한·주일 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 대만 문제에 일본·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자칫 대만해협의 충돌을 다른 곳으로 급격히 번지게 할 수 있다.

대만은 중간 수준의 공업국이자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파트너이자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적 맥락에서 ‘대만 독립 선언’은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대중국 봉쇄 전략과 맞물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중국 지배 관료는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경우, 무역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는 평화 축진이 아니라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대만에서는 통일 주장이 인기가 없지만, ‘독립 선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고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대만 노동자 운동은 ‘통일이냐, 독립이냐’를 두고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팬스레 운동을 분열시키기만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다. 최강대국 미국과 충돌한다고 해서 그 제국주의 강대국에 진보적 색깔을 입혀서는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이는 중국 제국주의의 대외적 힘이 강화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강조돼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 지향 속에서야 비로소 중국 대륙과 대만의 노동계급이 진정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김영익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1년 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대중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빈과일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슈아 왕의 데모 시스토당을 비롯해 몇몇 야당들은 탄압 속에 당을 해산해야 했다.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령(사진)에게 현재 홍콩 상황과 전망에 관해 물었다. 그는 홍콩 '레프트21' 회원이며 《후기 천두슈 선집》의 편집자다. 람치령은 홍콩 태생으로 광저우 지난대학교를 다녔고, 1989년 톈안먼 항쟁 연대 운동에 참가했다. 이후 홍콩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홍콩은 매우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 2년 전 송환법 반대 운동에 참가했던 1만여 명이 체포됐고, 2500여 명이 기소됐다. 그 외에도 대략 100여 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는데, 〈빈과일보〉의 설립자 라이치잉(黎智英, 지미 라이)과 고위층 인사들 다수, 지난 입법회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초선 의원 47명, 재야단체 회원과 시위 참가자 등이 포함돼 있다. 많은 정치단체와 민간단체(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종교단체·의사·공무원노조 포함) 역시 해산을 선언했다.

2021년 6월 말 〈빈과일보〉가 폐간된 것 외에도 홍콩의 비주류 매체를 역시 커다란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매체 〈입장신문〉(Stand News)에서는 오래된 글들이 모두 삭제됐다. 공영 방송이지만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편집권이 있던 '홍콩TV'(Radio Television Hong Kong)도 지난 반 년 동안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받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가 바뀌었다. 시민들이 인터넷 댓글을 달고 정치적 문구를 표현하는 데 조심스러워지고, 국가안전부의 감시나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다.

홍콩 주민들이 지난 40년 동안 누려온 언론·신문 발행의 자유가 이제는 위태로워졌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른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외국 단체와의 결탁 등을 밝히는 발언[행위에 한정되지 않음]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국가 분열', '국가 전복', '외국 단체와의 결탁'으로 볼지 그 정의는 모호하다. 중국 당국은 이를 고의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통제를 강화한다.

친정부 인사의 말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반대파 공격만이 아니라 적어도 2년 동안 '정치적 숙청'을 진행해 홍콩의 사법·사회·문화·사상·교육·언론 등의 영역을 전면 개편하고



자 하는 것이다. 또한,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홍콩 정부 스스로 홍콩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를 다시 입법하려 하면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2003년에 시민 50만 명이 시위해서 입법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번에 폐간된 〈빈과일보〉는 어떤 신문이었고, 시진핑 정부는 왜 이 신문을 공격했는가?

1995년 창간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자 민주파 입장을 지지하는 신문이다. 창립자 지미 라이는 민주당 등 민주파 주류를 줄곧 지지했고 이 정당들을 후원해 왔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 기간에 라이는 미국에 가서 공화·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 "홍콩 대중이 지금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 가치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고 말했다. 이를 볼 때 〈빈과일보〉는 중국 정부의 눈엣가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빈과일보〉의 정치적 입장은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반대하고 홍콩 정부에 비판적이며, 공산주의(진위를 가리지 않고)에 반대하고, 친미이며,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 〈빈과일보〉는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 유명 연예인과 몇몇 인사들을 회화화해 유료 뉴스를 만드는 타블로이드 기풍을 가진 신문이다.

[홍콩에서] 사회주의 좌파는 〈빈과일보〉를 포함해 어떤 신문이든 정간되는 것에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하지만 우리들은 〈빈과일보〉의 정치적 경향을 무원칙하게 지지할 수는 없다.

〈빈과일보〉 폐간은 홍콩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홍콩 시민 대다수는 〈빈과일보〉에 동정을 보냈다. 6월 24일 발행 마지막 날에 100만 부가 인쇄돼 당일 모두 판매됐다. 어떤 시민은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가서 기자들을 응원했다.

올해 6월 4일 톈안먼 항쟁 기념 집회와 7월 1일 홍콩 반환 기념일 등 민주적 집회가 금지됐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탄압하에서 〈빈과일보〉를 대규모로 성원하는 활동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다수 시민의 마음은 정부의 독재에 반대한다.



6월 4일 톈안먼 항쟁 기념 집회를 가로막고 있는 홍콩 경찰

홍콩 당국이 '가짜 뉴스' 단속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들었다.

5월 초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은 홍콩 정부가 '잘못된 소식, 악의적 보도, 거짓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신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분명하게도 '가짜신문법' 제정은 홍콩 정부가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편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 현행 법률에는 가짜뉴스 배포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방, 허위 투자 소식 발표, 의료나 약물과 관련된 가짜 뉴스 등에 관한 법 조항이 있어서 또 다른 '가짜신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탄압 등을 근거로 서구 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권위주의와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모두 중국의 홍콩 탄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미국의 독점자본은 중국의 관료 집단과 수천수만의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 시장을 진정으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송환법 반대 운동 기간에 트럼프는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홍콩 대중 운동을 "폭동"이라고 불렀다. 예상하건대, 바이든도 [홍콩에 대해] 입으로만 떠들 뿐일 것이다.

2019~2020년 홍콩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기대하면서, 트럼프가 중국 정부를 압박해 홍콩 대중 운동 탄압과 국가보안법 통과를 중단시켜 주기를 바랐다. 홍콩의 극우 '본토파'는 미국에 대한 비현실적인 희망을 부채질하고 심지어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을 미화하기도 했다. 예컨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트럼프에 반대하는 중국의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퇴진하면서 이들은 절

망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의 민주적 자치를 쟁취하려면 홍콩을 비롯한 각지의 노동자들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중국 대륙의 노동자·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해 동안 주장했다. 홍콩 민주주의의 앞날을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와 자본가 정당들에 맡기는 것은 결국 [홍콩을] 중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지형학적 패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다. 또, 중국 관료들이 홍콩 민주주의의 항쟁을 왜곡해 중국 대륙과 홍콩의 대중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게 할 수도 있다.

중국 대륙과 홍콩의 대중이 단결해 공동으로 중국 전체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2년 전 홍콩 대중은 송환법에 반대해 인상적인 투쟁을 벌였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홍콩은 2014년 '우산 운동'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의 실패를 경험한 데다 정부의 강력한 탄압까지 더해져 터라, 앞으로 한동안 큰 규모의 대중적 항의 운동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대체로 홍콩 민주주의의 앞날은 중국 대륙의 통치 위기나 경제 위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관료 통치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상당히 엄혹해지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은 막막해하거나 외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는 과거 대중 운동의 목표와 전술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세대 청년들은 사회주의 좌파의 견해나 '신노조운동'[2019년 대중 투쟁의 영향으로 시작된 노동조합 건설 운동]의 경험 등 다양한



〈빈과일보〉 마지막 호를 들고 항의하는 홍콩 시민

견해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과거 대중 투쟁의 경험은 마치 사회주의 좌파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듯하다. 첫째, 느슨하고 서로 책임지지 않는 게릴라적 행동이 아니라 대중의 자기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자의 자기 조직과 파업 등 직접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와 반자본주의적 사회·경제적 요구가 결합돼야 한다. 셋째,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홍콩과 중국 대륙의 진보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홍콩의 사회주의 좌파는 비록 영향력은 작지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간의 발전을 했다. 그 후 '본토파' 운동의 부상을 보며 범좌파들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토파 운동에 흡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중 운동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 사회주의 좌파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신세대 청년들과 함께 대중의 최대 관심 의제에서 시작해 조직하고, 동시에 (혁명적 사회주의와 우익 포퓰리즘의 구별처럼) 사상을 명확하게 해야 성장할 수 있다.

번역 이정규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정원석 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이 글은 7월 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대중의 눈치를 보며 ‘공정’을 공약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심화했다. 상위 10퍼센트 소득 비중이 2017년 48.4퍼센트에서 2019년 49.4퍼센트

로 올라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순자산 5분위 배율(순자산 상위 20퍼센트 그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퍼센트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2017년 99.65배에서 2020년 166.64배로 급증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극화가 더 커진 것이다. 심화하는 불평등(게다가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에 대중의 기대는 배신감과 환멸로 바뀌었다.

일련의 공정성 논란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물음을 던진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립됐음에도 왜 공정이 실현되지 못하는가? 왜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하는가? 왜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옹호할까? 등등. 최근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논의의 대부분은 불평등이나 공정을 능력주의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민이 체감한 교육”은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는 동시에 경쟁도 강화되는 교육이었다

능력주의는 무엇인가?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자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자원(부와 권력)을 차등 분배하는 시스템(이데올로기)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자들은 능력주의가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 이동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논리들은 사실상 허구다. 우선 ‘온전히 개인에게 속한 능력’이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개인의 능력은 가정환경을 비롯해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어떤 능력이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사회적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관점이 반영된다. 개인의 성공에는 비능력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운과 같은 우연적 요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능력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애초부터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다시 말해 계급 사회에서는 출발선이 다르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경쟁의 룰도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정해진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보상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논리적 허구성을 차치하더라도 결국 능력주의는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쁜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능력주의에 기대를 거는 걸까?

일부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매달리는 것은 그저 능력주의를 맹신해서가 아니다. “절차적 공정”, “공정한 경쟁”에 목을 매는 것은 부모 찬스가 없

는 평범한 청년들이 오직 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만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거나,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고, 평등이나 연대보다 경쟁을 선호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인 미래가치관 연구’ 보고서는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더 평등과 연대에 열려 있음을 보여 준다.

능력주의 논쟁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능력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미국 사회의 능력주의를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책들 — 특히, 《엘리트 세습》(대이얼 마코비츠)와 《공정이라는 착각》(마이클 샌델) — 은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한때 자본주의 황금기에 성장과 번영, 민주주의를 이끄는 기관차로 추앙받던 능력주의가 어쩌다가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흔히 이데올로기적 변질(세습주의로 전락했거나 새로운 귀족주의로 변질됨)을 지적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기회균등’과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현실에서 점점 더 실현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능력주의의 기원과 부상

능력주의는 어떻게 생겨났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성장하게 됐을까? 개인의 능력에 따른 대우라는 신조는 자본주의와 함께 탄생했다. 프랑스 혁명은 혈통이나 신분기 아니라 재능에 의

한 출세’를 기치로 내걸었다. 당시로서는 귀족세습주의에 맞선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있었다.

능력주의가 주되게 작동하는 분야는 교육과 직업 분야다. 대학 입학 시험인 독일의 아비투어는 1788년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1808년에 도입됐다. 그 시대에 시험은 인간을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평등한 개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됐다. 한편 19세기에 국가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면서 영국에서는 1870년, 미국에서는 1883년에 국가관리, 즉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에 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의 전통적인 임용 방식은 부패와 무능으로 비난을 받았고 공개 경쟁 시험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 있는 관리를 뽑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됐다.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는 1958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능력주의가 귀족주의를 물리치고 처음에는 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능력에 따른 엘리트 지배체제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풍자 소설이었지만 그가 경고한 바는 현실이 됐다. 1945년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했고 중등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능력주의와 타협하면서 교육 기회의 확대가 결국은 능력에 따른 교육의 계층화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기회균등과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틀이 자리를 잡았다.

1950~1960년대 미국에서는 일종의 능력주의적 대학 입시 개혁이 이뤄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비리그와 같은 엘리트 대학은 성적보다는 어느 가문 혹은 어느 학교 출신이나, 학비를 낼 재력이 있느냐 등을 더 중시했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입학 전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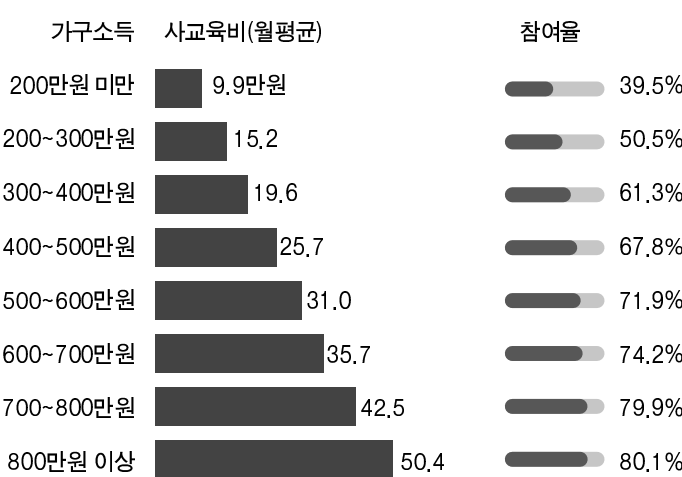
에 대입 자격시험인 SAT를 포함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부유층이 아니어도 성적이 우수하면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고등교육이 대폭 확대됐는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고급 인력과 유능한 엘리트들이 대거 필요해졌다. 1960년대 들어서 예일대가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능한 엘리트들 유능한 엘리트로 대체하려는 노력이었다. 능력주의는 귀족세습주의에 비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 시스템을 체제에 제공했다.

오늘날 대중이 능력주의를 신념 또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50~19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한국에서는 1970~1980년대 자본주의 급성장기에 중산층이 형성되고,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였던 시기를 거치면서다.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서 점차 능력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약화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의 집중과 격차가 굳어진 것도 이런 효과를 냈다.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기가 끝나면서 능력주의가 발현한 약속어음의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 계층이동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바로 능력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약화되면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2020년 3~5월, 7~9월 6개월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조사





흔한 상식과 달리 시험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수단이 못 된다

교육의 구실

흔히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상징한다. 대중교육, 즉 보편교육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는 결코 균등하지 않다.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적과 학교 수준이 결정되고, 그것이 향후 직업(소득과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부모한테서 자녀에게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통로가 된다. 가정환경에서부터 사교육,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의 양과 질은 천지차이다.(왼쪽 그림)

2018년 한 통계를 보면,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고등학교까지의 양육비 지출이 8000만 원 정도인데,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양육비가 9억 원 정도로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여러 연구와 통계를 종합해 보면, 가난한 집 자녀들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도 못가고 저임금 일자리로, 부잣집 자녀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명문대를 나와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는 ‘엘리트 유치원 - 사립학교 - 아이비리그 - 전문대학원’인데, 총 학비만 평균 100만 달러(약 11억 3000만 원)가 넘는다. 한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총 학비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교육 기회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실을 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도 실력 이야” 하고 말했는데, 정말이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진짜 실력이다!

시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럼 도대체 시험, 특히 필기시험이 가장

공정하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본주의에서 시험이 하는 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가 교육을 통제·관리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학생을 선발, 배치하기 위해서다. 즉 엘리트, 전문직, 중간관리자, 숙련 또는 미숙련 노동자 등으로 위계화된 노동 시장에 배치하는 구실을 한다. 시험은 자본주의 초기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자본주의에서 모든 것이 수량화되듯, 인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결과도 수량화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19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초등교육이 확대되면서 표준화 시험이 도입됐다. 일선 교사들이 해 오던 교육과정이나 평가(주로 구술 평가)는 낮고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았다. 대신 표준화 시험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주입됐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중등·고등교육이 확대됐는데, 대규모로 학생을 선발·배치하기 위해 표준화 시험이 빠르게 확산됐다. 20세기 초에는 과학주의, 계량심리학 등의 이름으로 지능검사가 유행했는데, 1914년 개발된 선다형 시험 덕분에 값싸고 빠르게 대규모 집단의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대학입시에서도 에세이 시험이 사라지고 선다형 시험만 남았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미국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50년대부터 지능검사를 광범하게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효율적으로 인간을 사회에 배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회개혁의 일환이었다. 또한 ‘과학적 평가운동’이 전개되면서 입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이 객관식 시험으로 전환됐다. 객관식 시험은 값싼 비용으로 대규모 집단을 측정해 서열화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화 시험은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도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로 여겨지며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산업

과 기술이 고도화되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이 생겨났고 취업 전형도 다양해졌다. 객관식 지필고사만으로는 유능한 노동력을 길러내거나 평가(선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능력을 시험 결과로 서열화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필시험’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오래된 상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방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표준화 시험이 다른 평가 방식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학종을 흔히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학종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수능 점수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관계가 더 높다. 정시나 수시나, 수능이나 학종이나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둘 다 노동계급에게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에서 교육과 시험이 하는 구실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에 노동자 정부는 시험과 성적제도, 그리고 졸업장과 학위제도를 폐지했다. 노동자를 선별하고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EO와 일반직원 연봉 격차

	직원 평균 연봉	등기임원 최고 연봉
삼성전자	1억2000만원	145억7000만원 142.8배
현대제철	8700	115억6000(퇴직금 포함) 132.8
LG화학	7300	48억7300 66.7
현대차	9700	57억2000 58.9
LG	8544	44억2300 51.7
현대중공업	7527	36억9900 49.1
포스코	8200	39억9600 48.7
현대모비스	9000	42억9000 47.6
삼성SDI	7400	34억4000 46.4
SK이노베이션	6593	27억6500 41.9

노동에서의 공정 논쟁

노동 분야에서 공정성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금 격차다.

일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에서 거듭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취준생과 정규직 노동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역차별”, “무임승차”, “로또 취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대중의 그릇된 공정 관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겉모습만 보면 일부 청년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을 내세워 ‘차별’을 옹호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벌어진 핵심 원인은 문제인 정부의 ‘돈들이지 않는’ 개혁이다. 실제로는 개혁에 필요한 재정은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취준생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는 불안감에 내몰렸고, 점점 더 조건이 악화되고 있던 정규직들도 앞으로 임금과 복지가 더 깎이지 않을까 불안했을 것이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이간질을 부추기고 책임을 회피한 정부다.

둘째, 투쟁적 대안의 부재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의 청년·학생들이 능력주의적 대안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비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부는 계급 단결이라는 원칙을 옹호하기보다는 조직 보존을 선택했고, 정부의 이간질에 취약해진 노동운동은 청년·학생들의 불안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는 노동조합 지도자들뿐 아니라 올바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좌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흔히 임금 격차에 대해 말할 때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따진다.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대기업의 60퍼센트 정도다. 물론 이것은 해소돼야 할 격차다. 그런데 이런 격차가 왜 생겨났을까? 그 이유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월 임금 200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퍼센트에 달한다. 그만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임금 격차와 직무급제

실제 진정한 임금 격차는 CEO와 일반직원 사이에서 벌어진다. 격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데, CEO는 일반직원이 평생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연봉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노동자가 CEO의 1년 연봉만큼 벌려면 무려 143년을 일해야 한다.(아래 그림) 정부와 기업주는 계급 간 격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호봉제가 나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이롭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직무급제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공정한 임금체계인양 선전한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들이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다면 이런 이간질에 휘둘릴 수가 있을텐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직무급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직무급제의 본질은 결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받아 왔으므로 그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면 될 일이다. 직무급제는 직

무 평가에 따른 보상을 한다면서 차별을 합리화, 정당화한다. 어떤 직무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사용자들이 보기에 이윤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업무, 가령 경영이나 관리와 같은 이른바 ‘핵심’업무는 높은 가치를 받는 반면, 청소·식당·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 등 ‘비핵심’업무는 낮은 가치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직무급제 하에서 이들의 저임금은 더는 차별이 아니라 직무가치에 따른 공정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직무급제는 결코 청년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대안이 못 된다. 공정성을 핑계로, 특히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불평등의 원인과 대안

능력주의 논쟁은 결국 불평등의 원인과 대안을 둘러싼 것이다.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은데,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문제와 직결돼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노동 착취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계급과 착취에 기반하지 않고 불평등을 설명하는 일련의 이론들은 모두 잘못된 대안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길게 언급할 수 없지만, 최근 유행하는 세습론이나 세대론이 그런 사례다.

능력주의 문제 역시 체제와 계급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윤리적 관점을 반영하고 노동 착취와 이윤 경쟁 체제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가 공정하나 불공정하냐는 물음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능력주의는 자본가 계급에게는 공정하고 정의롭지만 노동자 계급에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다.

진보진영 내 적잖은 사람들이 존 롤스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긴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 “정의”를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중 두 유명한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손해자

에게 득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리이다. 이 원칙은 한편으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과 복지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공정성’의 문제로 봤는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공정하기만 하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공공선’은 계급 적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라는 개념은 계급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탈능력주의를 조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계급이라는 요인 때문에 둘을 조화시키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는 냉혹한 경쟁을 정당화하고, 알량한 기회를 제공한 다음 불평등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반대하고, 지배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능력주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기회’,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의 현실을 보듯이, 저들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

능력주의에 대해 근원적으로 비판하

는 담론들이 대안 문제에서 급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능력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분배 원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현행 조건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능력주의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 체계가 된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자원을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다.

필요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전제가 잘못됐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주된 이유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생산이 대중의 필요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주거, 음식, 의료 등)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치와 낭비가 극심하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민주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이익을 조화시키면서 개인의 필요에 훨씬 더 잘 부응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야기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 사

회가 된다면 우리는 더는 공정이나 정의를 사회윤리로서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일부 청년들이 공정성이나 능력주의에 기대를 보이는 것은 그것을 맹신해서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공감하면서도,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동력은 개인의 경쟁력이 아니라 계급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달려 있음을 차분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과 저항이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향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평등주의적 정의는 오로지 자본주의에 반대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와 공정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이준석 같은 우파들은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정부는 직무급제와 같은 노동개악을 ‘공정’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진보·좌파들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정부의 이간질이나 노동개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 예로, 노동운동 내 일각에서는 연대임금제나 사회적 직무급을 노동계급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데올로기적 개입과 계급투쟁 건설 모두에서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추천 책과 소책자

개항도보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외 지음

개항도보판
마르크스주의 윤리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레온 트로츠키, 존 듀이 외 지음
이수현 외 옮김 | 책갈피
184쪽 | 12,000원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외 지음 | 노동자연대
50쪽 | 2,000원

※ 구입 문의:
전화 : 02-2271-2395
<https://workerssolidarity.org>
(책자 구입 및 pdf 무료 다운로드 가능)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마르크스주의와 윤리

레온 트로츠키, 존 듀이 외 지음
이수현 외 옮김 | 책갈피
184쪽 | 12,000원

※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도널드 럼즈펠드는 패배하지 않는다.” 제임스 만은 조지 W 부시의 전쟁 내각을 다룬 책 《벌컨의 부상》[국역: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박영출판사)]에서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 수십 년간 암암리에 퍼진 속설”이라고 했다.

6월 29일 사망한 도널드 럼즈펠드는 1960년대 말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보좌관을 지냈다. 닉슨의 대화를 담은 워터게이트 도청 기록을 보면, 닉슨과 그의 냉혹한 보좌관 존 얼리크만과 H R 홀더먼이 럼즈펠드를 야심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책략꾼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럼즈펠드는 1974년 8월 닉슨이 물러난 후 그러한 평가를 입증했다. 후임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럼즈펠드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가, 이후 그 자리에 럼즈펠드의 제자이자 오른팔이었던 딕 체니를 앉히고 럼즈펠드는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이들은 소련과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추진하던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대외 정책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

럼즈펠드와 체니는 소장 관료들과 함께 미국이 베트남에서 당한 수치스런 패배를 뒤집고자 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 전개된 신냉전의 기틀을 닦았다.

럼즈펠드는 대권 욕심을 품고 이를 무심결에 드러내기도 했지만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하자 재계로 진출해 돈을 벌었다.

럼즈펠드는 로널드 레이건의 중동 특사를 지냈다. 이 직책에 있을 때 럼즈펠드는 1983년 12월 바그다드로 날아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만났다.

럼즈펠드는 후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이라크처럼 세계와 중동에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라크를 이란에 대항하는 균형추로 삼고자 했다. 레이건과 럼즈펠드는 후세인이 이란과,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무시했다.

이란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소련이 몰락한 이후 후세인의 야심이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위협하게 되고 나서야 후세인의 범죄는 도마에 올랐다. 럼즈펠드는 신보수주의[네오콘] 압력 단체에 동참했다. 이 단체는 1991년 당시 대통령 조지 H W 부시가 연합군을 이끌고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패배시킨 후 후세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했다.

10년이 지나고 조지 H W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에야 럼즈펠드는 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럼즈펠드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아들 부시의 부통령이 된 체니는 럼즈펠드를 국방장관직에 앉히는 데 힘을 실어 줬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가 공격당했다. 9·11 공격은 이라크와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럼즈펠드는 보좌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UBI[오사마 빈 라덴—캘리니코스]만이 아니라 S.H.[사담 후세인—캘리니코스]도 동시에 칠 만한 일인지 판단할 것.”

이라크를 공격 목표로 삼는 근거가

된 전략을 가장 명확히 정식화한 사람은 럼즈펠드의 국방부 차관이 된 윌포 위츠였다.

윌포위츠는 “신흥 강국”, 특히 중국의 부상이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친서방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면, 미국의 주요 경쟁국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지역인 중동에서 미국의 지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럼즈펠드는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럼즈펠드는 약자에 대한 오만함에서 나오는 매력으로 미디어 스타가 됐다. 만은 2004년에 럼즈펠드를 “미국의 노련한 전쟁 장관”이라고 불렀다.

반면, 럼즈펠드 사망 후 《애틀랜틱 먼슬리》의 조지 패커는 이렇게 썼다. “럼즈펠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방 장관이었다.” 럼즈펠드의 중대한 실수는, 축소된 인원이지만 민간 기업들과의 연계 속에서 지원받는 중무장한 원정군을 보내면 이라크라는 가난하지만 거대하고 복잡한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서 후세인의 군대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럼즈펠드와 그의 장군들은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진 무장 저항에 속수무책이었다.

무차별적 화력 사용도, 아부그라이브 감옥의 고문도 효과가 없었다. 종파간 갈등도 부추겨 봤지만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2006년 11월 부시는 럼즈펠드를 경질해야 했다. 2011년에는 미국이 후원하는 이라크 정권이 이라크 주둔 미군에 철군을 강요했다.

젊은 시절 럼즈펠드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가 낳은 문제와 씨름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더 심각한 패배의 기획자였다. 럼즈펠드와 그가 떠받든 제국 모두 커다란 패배를 겪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62호 / 번역 김준호



악마가 죽었다 2006년 미 백악관에서, 럼즈펠드와 또 다른 전쟁광 악마 조지 W 부시(왼쪽)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 미국의 참패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한 철군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이 미국의 패배에 어찌 대처할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가 살펴본다.

서방이 일으킨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서방의 패배로 끝났다.

퇴역한 영국 육군참모총장 리처드 다나트가 지난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내린 결론이다.

7월 2일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를 마치자 지역 주민들이 그 거대한 기지에 들어와 미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닦치는 대로 주워 갔다.

이번 철군은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 2500~35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선언한 철군 완료 시점인 9월 11일이 아직 몇 달 남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한편, 2001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분쇄하겠다고 공언했던 탈레반 전사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을 분주하게 속속 탈환하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정부가 6개월 안에 타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나트는 이렇게 썼다. “결국 탈레반 무장 세력이 승리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비극적이게도 내전이 일어나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진 출처: 미군

20년에 걸친 전쟁의 대가는 수많은 인명 살상, 극심한 혼란과 고통뿐

서방의 실패한 군사 작전이 치른 대가는 살상된 인명으로 헤아려야 한다.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미군의 폭격 때문이었다.

폭격

그 수는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서방 군대들은 그들의 유해를 세지 않기 때문이다. 개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렁이 된 이 전쟁으로 나토군도 수백 명 전사했다. 20년 전 전쟁으로 나아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당시 블레어는 “연민 가득한” 침략자를 자처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을 교체하는 것이 그저 미국의 패권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짓는다는 훨씬 더 고결한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고 했다.

블레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 대의는 정당하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인도적 이유에서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자유주의적인 기득권층 다수가 여기에 동의해 줬다.

미군의 폭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학교가 파괴됐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도 계속 그랬다.

하지만 사망자가 늘자 카불의 ‘안전지대’ 바깥에 살면서 점령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상황은 악화됐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가장 오래 치른 전쟁이 됐다. 기껏해야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점령의 유일한 실질적 기능은 미래의 도전자들을 단념시키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뿐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을 보라. 난장판이다. 온 나라가 갈등에 빠져 있다. 고통이 극심하다.

“극단주의와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

며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온 자들은 그것들을 끝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감시하에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나트의 평가에 동의하며 탈레반과 여러 군벌들 사이의 새로운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래로 줄곧 혹독한 분쟁을 겪어 온 아프가니스탄 주민들로서는 끔찍한 전망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마지막 카드를 아직 남겨 뒀다.

현재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한때 아프가니스탄을 무인기로 폭격할 때 이용했던 미국 공군 기지를 재가동하려고 파키스탄 정부와 협상 중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2011년에 미군을 쫓아낸 바 있고, 파키스탄 정보국(ISI)은 탈레반의 주요 후원 세력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옛 소련 블록 소속 공화국들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이용된 군사 기지들의 사용권을 다시 얻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상군이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을 “해방”시키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62호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난다

닉 클라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나섰다.

6월 25~2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의 도시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무드 아바스의 사퇴를 요구하며 10년 전 아랍 혁명의 구호 “인민은 정권 타도를 원한다”를 외쳤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은 시위 진압 장비로 무장하거나 사복을 입고 시위대를 공격했다. 곤봉과 주먹으로 구타하고, 심지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러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그중 한 명인 니자르 바나트가 구금 중



사진 출처: Pinku Alami(메이스트라)

6월 26일 라말라에서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인들

경찰의 구타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어졌다.

올해 5월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당시 항쟁의 규모와 대중적 지지가 어찌나 컸던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총파업이 벌어지는 동안 행진을 조직해 항쟁에 지지를 표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러나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협상하길 바라고, 이런 행태를 비판하거나 저항을 더 밀어붙이려는 활동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

이런 탄압이 있기 전, 5월에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아바스와 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이스라엘에 협조해 팔레스타인 내 손바닥만한 지역에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993년 미국·이스라엘과의 협상으로 수립됐다. 당시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저항을 끝내겠다고 합의했다.

1967년부터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제한적 통치를 허용했다. 그 보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지배를 돕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눌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가다운 국가를 세우도록 내버려 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작은 도시에 맞먹는 유대인 정착촌을 더 많이 건설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위기에 빠졌고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 올해 아바스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질 대선도 취소했다. 자신이 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정 책 조사 연구 센터(PCPSR)가 6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56퍼센트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부담이라고 답했다.

반면, 지난 5월 시위 이후 이스라엘에 맞선 무장 투쟁에 대한 지지와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들에 대한 지지는 높아졌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대중 시위와 파업은 이스라엘에 맞선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새로운 저항이 시작됨을 알렸다.

현재 서안지구 시위는 그 저항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저항은 자신을 짓밟으려는 팔레스타인 “공식” 통치자들에게도 맞서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61호 / 번역 박혜진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몰락하다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피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아무런 전략이 없다고 불평했다.

스타머가 물러나길 내심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타머나 그 측근들의 실패를 비난한다. 그래서 이 “논쟁”은 스타머를 누구로 대체할지 또는 어떤 정책을 바꿔야 할지를 둘러싸고 이뤄진다.

좌파 의원들은 이미 좌파에게 등을 돌린 부대표 안젤라 레이너의 당대표 선거 도전을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파들은 스타머가 계속 당대표로 남는 것을 마지못해 지지한다.

문제는 당내 좌파든 우파든 어느 쪽도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위기는 단지 당대표의 위기가 아니다. 노동당 내의 불안은 유럽의 모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일 뿐이다.

영국 노동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는 훨씬 오래 전부터 약화돼 왔다. 하틀리플, 배틀리, 스펜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표를 잃은 것은 이런 과정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노동당이 총선에서 얻은 표는 1987년 이래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줄곧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좌파 활동가들은 토니 블레어 지도부 하에서 당이 급격히 우경화해, 그의 정부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하고 [신자유주의로] 노동계급을 저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옳게 지적한다.

하지만 의미심장한 것은 유럽 전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런 몰락을 동시에 겪었다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쇠락하거나, 붕괴하거나, 전멸 직전에 이르렀다.

이런 정당들은 노동계급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실제 근거가 있는 정당들이다. 그 근거는 흔히 노동조합 지도부와와의 연계에서 비롯한다. 이런 정당들은 많은 경우 말로라도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으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즉,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약속하고는 체제를 관리하려 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설립하거나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구실을 정치에서도 하기 위해서다. 즉, 파업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심지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영국 노동당의 위기는 모든 유럽 시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일부다. 현 노동당 대표 스타머(왼쪽)와 2020년 초까지 당을 이끈 좌파 인사 코빈(가운데)

대부분의 시기에 상당수 노동계급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런 정당들은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흔히 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기업들이 요구하면 심지어 자신을 찍어 준 노동계급을 배신하기도 했다.

그들은 기업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관리하면서도, 노동계급에게 이롭게 그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압력 사이에서 항상 진퇴양난에 처했다.

그러나 언제나 우선순위는 체제 관리였다. 물론 그러면서도 적어도 보수 정당들과는 다르게 체제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날 체제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삐 풀린 자유 시장 정책, 즉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자본주의 운영 방식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신자유주의 컨센서스”는 모든 나라 정부의 거의 모든 주류 정당 사이에 이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의견이 합치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다른 보수 정당들과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게 됐다.

신자유주의

이런 과정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 기업주들은 민영화, 저임금, 정부 지출 최소화를 요구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추진됐다.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개척했다. 대처가 도입한 주민세에 분노한 노동계급이 소요를 일으켜 대처를 물러나게 한 뒤에도, 기업주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토니 블레어는 이에 화답해 노동당을 완전히 노골적인 친기업 정당으로

재편했다.

1997년부터 줄곧 노동당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하고, 공공부문 임금과 일자리를 삭감했다. 블레어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노동당은 많은 표와 당원들을 잃었다.

유럽 전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우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영국에서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후에 선출됐다.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 정책은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적어도 13만 명이 탈당했고, 득표가 1998~2010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몰락은 훨씬 더 극적이었다. 많은 경우 2007년 금융 붕괴가 분수령이 됐다.

그리스 사회당(파소크 PASOK)의 운명이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추락하는 과정을 일컫는 ‘파소크화(化)’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유럽 은행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굴복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긴축을 단행했다.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연금이 대폭 삭감됐다. 실업률이 거의 25퍼센트에 달했다.

그리스 사회당은 완전히 파산했다. 2009년 선거에서는 42퍼센트 득표했지만, 2012년에는 겨우 12퍼센트 득표해 정부에서 물러났다.

사회당은 한때 그리스 주요 정당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당은 도합 22석을 보유한, 고전하는 중도좌파 정당들로 이루어진 연합지졸 연합체를 이끄는 신세로 전락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끈 프랑스 사

회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올랑드는 미움받고 부패한 [우파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와는 다르게 정부를 운영할 것이며 “더 유연”하고 “공정”한 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랑드는 금세 약속을 폐기했고, 2014년 대대적인 공공지출 삭감과 기업 감세에 착수했다. 올랑드는 뒤이어 노동법 전면 개악을 추진했다. 이는 대규모 파업과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노동자들과의 이런 충돌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위기에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돌

노동계급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환멸을 느끼고 결국 그 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세우고 지지한 정당이 도리어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다. 조합원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노조 지도자들은 때때로 사회민주주의 정부에 맞서 파업을 조직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거나, 보수당 정부에 맞선 파업을 노동당이 지지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온건파 지도자들조차 이를 공공연히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의 결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실제로 결별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최종적인 결별이나 정면 대립을 피했고, 협상에 무게를 실은 채 파업을 억제하려 했으며 그러는 데 대체로 성공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이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들[노동조합 지도자들] 간의 관계 악화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지지를 깎아 먹는 요인이 된다.

좌·우를 불문하고 주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붕괴하자 다른 정당들이 부

상할 기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서 두각을 보인 것은 우익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당들이었다.

물론 좌파가 전진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한때 급진적이었던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였을 것이다. 시리자는 2015년 선거로 집권했다.

연립 정부에 참가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그런 사례다.

둘 다 기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대안을 자처하며 성장했다. 영국 노동당에서 [좌파 인사인]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기존 지도부에 대한 분노와 더 나은 정치에 대한 염원을 반영했다.

좌파 개혁주의도 위기

하지만 그리스의 시리자와 달리, 코빈은 영국판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사회주의자들과 코빈 지지자들은 흔히 코빈 지도부가 노동당의 쇠퇴를 (일시적으로) 역전시켰다고 지적한다. 코빈의 2017년 총선 선거운동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코빈 지도부는 노동당의 위기를 그저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빈은 자신이 정부를 운영할 만한 사람임을 노동당 의원들과 기업인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코빈의 추락을 낳았다.

시리자와 포데모스도 결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 시리자 정부는 사회당 정부가 했던 일을 되풀이했고 [국내외] 은행들이 요구하는 긴축을 시행했다. 포데모스는 한때 자신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파트너로 연립 정부에 참가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그들의 좌파적 대안이라는 정당 모두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끊임없이 노동계급을 공격하라고 요구하는 체제 내에서 약속한 개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체제 내 개혁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 맞서기를 추구하는 조직과 투쟁이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6호 / 번역 김지혜

추천 책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이언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472쪽, 20,000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양효영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 (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차 파업 종료 이후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심층사무소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가하게 됐지만, 공단 측이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직접고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주 1회 하던 협의회 논의를 격주로 변경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했다.

고객센터 노조 서울지회의 한 노동자는 7월 1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은] 의도적으로 최고조로 치달던 노



기층 투쟁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전진시킬 때만 공단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6월 10일 원주 본사 앞 파업 집회

조의 파업 투쟁을 끊어 놓기 위함이었다고 단결된 집단 행동을 방해하기 위한 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협의회에서 공단 측은 계열사, 자회사 전환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자들이 보여 줬듯이, 계열사나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간접고용일 뿐이다. 공단 측은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며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외주화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으로 내몬 것은 정부와 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코로나

19 유선 상담 등으로 방역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이처럼 상담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자, 전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이다. 이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로 공정이다.

3차 파업이지만 노동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명가량이 집결해 두드러진 대열을 이루고 투지를 보여 줬다. ‘이번에는 정말 이길 때까지 간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조는 7월 5일 원주 본사 로비에 다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차벽과 병력으로 둘러싸서 막았다. 상담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아무 답도 내놓고 있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경찰로 노동자들을 막는 데는 신속했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본사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본사 앞에서는 매일 집회와 문화제, 파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원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행진, 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 주요 대선 주자 면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파업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철은 종로3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광화문, 시청 등 서울 주요 도심에 경찰 병력이 깔렸다. 집회 내내 해산 명령을 내리며 방해한 경찰은 특수보를 편성해 대대적으로 주최 측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비난하지만 이건 위선이다. 방역지침을 지키며 야외에서 하는 집회는 밀폐된 작업장, 부대끼는 출근길과 퇴근길 지하철보다 위험하지 않다.

이미 정부는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는 수천 명씩 참가할 수 있도록 방역을 완화해 왔다.

4월 재보선 선거 때 주류 정당 후보들이 인파를 몰고 다니며 선거운동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노동자 집회



정부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보여 준다

에는 엄정 대응 운운하는 것도 위선이다. 방역을 구실로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를 했다.

경찰의 방해가 없었으면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구조조정 저지 등 구호를 외쳤다.

애초 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가는 모든 진입로에서 검문을 하고 여의대로에 차벽을 설치해 노동자들의 집회 참가를 막았다.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종로3가역으로 모인 후 도로로 진출해 순식간에 수천 명이 대열을 이뤘다. 민주노총은 그 자리에서 임시 무대를 만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대열에는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마트노조, 공공 비정규직노조들이 많이 참가했고, 3차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대열도 눈에 띄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에서 밝혔듯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지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노동 전환’ 등 노동계 지도자들을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친기업적 행보를 강화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누더기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중대재해법을 더 후퇴시킬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산재 사망과 시민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주 이익을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령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 집회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비난하는 건 지독한 위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려 한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무시하고 있다. 전환조차 배제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외침에도 답이 없다.

이 때문에 집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시와 약속 위반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발언자들이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대열에서도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활력이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집회 집중도가 높았다.

짧은 집회 후 노동자들은 세운상가 쪽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했다.

얼마 전 백배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보여 줬듯이 정부와 사측에게서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에 노동자들은 고무돼 보였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자들 사이에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저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 줬다.

양효영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 기간제교사노조 네 번째
설립 신고 : 단결권 보장하라
- ★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